

종합

# 전남 '녹색 경쟁력' 16개 시·도중 꼴찌

## 에너지 소비·CO<sub>2</sub> 배출량 높고 '녹색기술 특허' 등록도 미미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조사 결과

저탄소 녹색성장을 가능케 하는 '녹색 경쟁력' 부문에서 전남이 서울을 비롯한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녹색 경쟁력이란 최근 전 세계적인 화두가 되고 있는 녹색환경과 녹색혁신, 녹색사회 실현을 위한 것으로, 환경보호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그리고 지속적으로 가능케 하는 필수요소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은 18일 공개한 '16개 시·도의 지역녹색혁신역량 비교 분석 및 발전전략'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지

역별 녹색성장을 위한 혁신역량 수준을 비교·평가하기 위해 지역녹색혁신역량지수를 국내 처음으로 산정했다고 밝혔다.

지역녹색혁신역량지수는 ▲잠재력 부문(인적자원, 조직자원, 지식자원) ▲노력(연구개발, 혁신노력, 시민참여) ▲성과 부문(경제성과, 지식성과, 환경·에너지 성과) 등 3개 부문 9개 항목을 기준으로 평가·산정됐다.

이 같은 기준으로 평가한 결과에 따르면 전남은 녹색혁신 잠재력 부문에서 16개 시·도 중 14위(0.005), 녹색혁신 노력과 인지 부문에서 7위(0.167), 그리고 녹색혁신 성과 부문에서 16위(0.036)를 기록, 이들 3개 부

문을 전체적으로 평가한 종합지수가 0.258에 그쳐 전국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광주는 잠재력 부문 5위(0.163), 노력과 인지 부문 14위(0.117), 성과 부문 3위(0.244)로 종합지수에서는 6위(0.524)를 차지했다.

전국적으로는 대전이 종합지수 0.732로 1위를 차지했으며 경기(0.614), 서울(0.612), 경남(0.598), 충남(0.550) 등이 뒤를 이었다.

STEPI는 전남이 이처럼 낮은 평가를 받은 것과 관련 에너지 소비와 CO<sub>2</sub>배출량이 높아 환경·에너지 성과지수가 낮게 나왔으며, 녹색인적자원(인구대비 녹색연구원 및 박사연구원 수)과 지식자원(인구대비 녹색기술 특

허등록 수) 수준도 낮게 평가된 때문으로 풀이했다.

STEPI는 이에 따라 전남은 녹색기술인력 확충 및 녹색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한 지역 차원의 지원제도를 강화할 것과, 농산업분야 녹색산업 육성 및 기존산업 녹색화 전략을 동시에 추구해야 할 것이라는 지역발전전략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광역경제권 연계 발전전략으로 호남권의 경우 광주의 녹색인적자원과 연구개발 능력을 기초로 농업·바이오 분야 녹색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해야하며 이를 통한 대내외 시장창출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총괄기자 redplane@kwangju.co.kr

### 시·설

## 광주시·전남도 경제살리기에 더 노력해야

광주시와 전남도의 올해 경제살리기 2대 분야 사업이 타 시·도에 비해 부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17일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 등 경제살리기 2대 분야의 추진 실적을 평가한 결과 전남도는 2개 분야에서 모두 최하위 등급인 '다' 등급을 받았고, 광주시의 경우 중간 등급인 '나' 등급을 받았다. 인천과 충북이 최우수 평가를 받은 것과 대조적인 모습이다.

전남도는 청년인턴, 청년실업대책 등 일자리 창출 분야에서 최하위인 '다' 등급을 받는 수모를 겪었다. 광주시 역시 일자리 창출 분야에서 3차례 평가에서 모두 '나' 등급을 받았고, 서민생활안정 분야에서는 1·4분기와 상반기 두 차례 '가' 등급을 받았다가 이번 최종 평가에서 한 단계 낮은 등급인 '나' 등급으로 하락했다. 다만 청년실업대책과 사회

적 기업 육성 부문에서 광주시와 전남도가 우수 지자체로 뽑힌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광주시와 전남도의 경제살리기 사업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은 지역 실정에 맞는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부족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실질적·빈곤층 등 취약계층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 추진에 더욱 역량을 모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규모 사업장이 적은 광주·전남은 경제 살리기에 있어서 민간 기업보다 관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클 수밖에 없다. 올해 평가를 교훈 삼아 내년에는 광주시와 전남도가 보다 효율적인 경제살리기 정책을 펴야 한다. 타시도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 혁신도시 이전 대통령이 직접 독려하라

전국 혁신도시지구협의회 소속 기초 자치단체장들이 17일 정은찬 국무총리와의 오찬 간담회에서 혁신도시가 조기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진정성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했다. 정부 측에 혁신도시의 정상 추진을 요구한 것이다.

전국혁신도시협의회 단체장들이 뽑이 난 것은 혁신도시 조성이 지지부진한 데다 세종시 수경 논란으로 혁신도시가 표류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은 지금까지 혁신도시 이전 대상 157개 공공기관 중 40개는 승인조차 받지 못하고 부지를 매입한 기관은 8개밖에 안 된다. 특히 나주혁신도시 이전 대상기관인 한진 등 선도기관들이 세종시 수경안 추이에만 촉각을 곤두세우고 이전 작업엔 손을 놓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는 혁신도시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수차례 공언했

다. 정 총리도 이날 간담회에서 "세종시 발전방안 마련과 관계없이 정부의 혁신도시 추진의지는 변함없이 확고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작 이전 대상 기관들의 반응을 요지부동이다. 심지어 한진 같은 기관은 부지 가격 인하, 청사 규모 축소 등 온갖 이유를 대며 부지매입을 기피하고 있다. 대통령의 말도 듣지 않은 이들 기관의 의의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말로만 혁신도시 건설 의지를 천명할 게 아니라 구체적인 후속 대책을 강하게 추진해야 한다. 무엇보다 내년 1월 예정돼 있는 이전대상 공공기관장 회의를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고 조속한 이전을 독려해야 한다. 이전을 기피하거나 미루는 기관장은 엄중 문책해야 할 것이다. 혁신도시 조성을 위해 정부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든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 예산안 처리 연내 무산되나

### 여야 예결위 대치 격화... 與 수정동의안 상정 가능성

새해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간 대치가 장기간 초입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연내 예산안 처리가 무산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은 전남 한나라당과 친박연대의 계수조정소위 구성 강행을 저지키 위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접거한데 이어 18일에도 회의장에서 접거 농성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특히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가 제안한 '대통령+여야대표 회담'을 통해 4대강 예산 삭감에 대한 정부·여당측의 구체적 대안이 나올 때까지 장기 농성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예결위장 접거에 대한 '여론전'을 강화하면서 계수소위 구성 무산에 대비, 새해 예산안 수정동의안을 작성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한나라당의 기류는 회계연도를 13일 남겨둔 상황에서 김형오 국회의장이 '예산안 직권상정 배제' 방침을 밝히고 야당이 예결위 회의를 접거, 자칫 초유의 준예산 편성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여야가 끝내 돌파구 마련에 실패할 경우 지난 1993년 이래 16년만에 처음으로 계수조정소위가 가동되지 않은 채 여당에서 마련한 수정동의안이 분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한나라당이 수정동의안을 마련할 경우, 예결특위 전체회의에 상정·처리해야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고, 이에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실력저지에 나설 것이 확실해 또다시 충돌 사태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여야 대치 속에 한나라당 안상수, 민주당 이강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원내대표회담을 열어 4대강 예산문제를 비롯해 국회 정상화를 위한 담판에 나설 예정이지만, 견해차가 너무 커 타결 전망은 불투명하다.

결국, 여야간 예산안 처리를 위한 '패키지딜'을 모색하거나 정 대표가 제안한 '대통령+여야대표' 3자회담 성사가 여야 대치를 푸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여야 대치 장기화로 연내에 예산안이 처리되지 못할 경우 민심의 무게를 우려, 막판에 극적으로 4대강 일부 삭감 등을 통해 대타협을 시도할 것이라는 희망적인 관측이 있다.

하지만 청와대가 '대통령+여야대표'의 3자회담 의제에 4대강 예산을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이 확고하고, 3자 회담이 성사돼도 빨라야 내주 중반이 될 것으로 보여 예산안 처리를 위한 시간이 촉박한 실정이다. 게다가 여야 중진 12명이 전날 '대안으로 오해될 수 있는 예산 삭감'이란 중재안을 내놓은 데 이어 내주 초 회동할 예정이지만, 각당 지도부에서 중재안에 부정적 입장이어서 동력을 받지 못하고 있다.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논설실장	丁在炫
편집국장	申錫	편집국장	曹庚完
1952년 4월 20일 창간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내	사회 2부	2200-692	경영지원국
<대표 FAX>	222-4918	<F A X>	222-8005
편집부	2200-672	문화생활부	2200-661
정치부	2200-634	여론제작부	2200-679
경제부	2200-641	체육팀	2200-663
사회1부	2200-612	사진부	2200-691
<F A X>	222-4267	조사부	2200-571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 지구촌 창조 싱크탱크” 李대통령 기후변화 연설

이명박 대통령은 18일 내년 상반기중 설립될 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GGGI)와 관련, “각국의 녹색성장 계획을 지원하고 저탄소 지구촌을 창조해나가는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코펜하겐 벨라센터에서 열린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정상회의에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윈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 등에 이어 16번째로 환경건강전선그룹(EIG) 국가정상 대표로서 연설했다.

이 대통령은 전남 당사국 총회 국가연설을 한 데 이어 이날 다시 연설에 나서 당사국 총회 참석만 110개 정상 가운데 유일하게 두 번의 연설 기회를 가졌다.

이 대통령은 “지구촌은 대체제가 없다. 위기에 처한 지구촌 구하기 위한 행동을 대대적으로 해야 한다”며 “실용 오늘 우리의 의견이 다르다고 해도 그것이 행동을 막는 이유가 되도록 하지는 말자”고 역설했다.



### 북한가는 신종플루 치료제

18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에서 북한에 전달할 신종플루 치료제 타미플루 40만명분과 리렌자 10만명분을 실은 냉장트럭이 개성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전직 총리 예우 원칙 않아... 시민으로 왔다”

### 소환통보 9일만에 검찰 조사받은 한명숙 전 총리

검찰이 18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체포한 것은 첫 소환통보가 이뤄진 날로부터 9일 만이다. 한 전 총리는 검찰의 잇단 출석요구에 공개적으로 불응 방침을 밝히며 맞불을 놓았고, 검찰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이후에는 영장 집행에 응하지하면서 신정전을 받아들였다.

한 전 총리의 5만달러 수수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권오승 부장검사)가 지난 9일 밤 한 전 총리의 변호인에게 11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하면서 양측의 승강이는 시작됐다.

한 전 총리 측은 즉각 수사의 적법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으며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천명했다. 검찰은 14일 오전 9시를 기점으로 다시 한번 소환 통보를 했지만 한 전 총리는 불응 방침을 거듭 내세우며 버텼다. 결국

검찰은 “더이상의 소환통보는 무의미하다”며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하기 시작했고 결국 16일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즉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지 않고 다시 한번 이날 오전 9시까지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하는 등 마지막 순간까지도 강제구인을 피하고자 했다. 한 전 총리가 뇌물 수수 의혹 사건의 피의자 신분이라는 하지만 참여정부의 핵심인사인 만큼 전직 총리에 걸맞은 예우를 갖추는 한편 자진 출석의 기회를 충분히 주는 모양새를 취한 것이다.

또 한 전 총리 측은 정치수사사라며 공세를 벌였지만 법원이 혐의 사실에 대한 기본적인 소명이 있다고 보고 체포영장을 발부함으로써 검찰은 강제구인의 명분도 쌓게 됐다. 한 전 총리는 스스로 검찰 청사에 나갈 수는 없지만 체포영장을 발부한

법원의 판단은 존중하겠다는 입장 집행에 응했다. 출석 시한인 이날 오전까지 한 전 총리가 나오지 않자 검찰은 결국 체포영장 집행이라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고, 한 전 총리는 검찰에 체포된 첫 전직 총리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한편, 한 전 총리는 이날 조사과정에서 “(한 명의) 시민으로 왔다”며 조사에 응하면서도 당초 예상대로 묵비권을 행사하며 수사팀을 곤혹스럽게 만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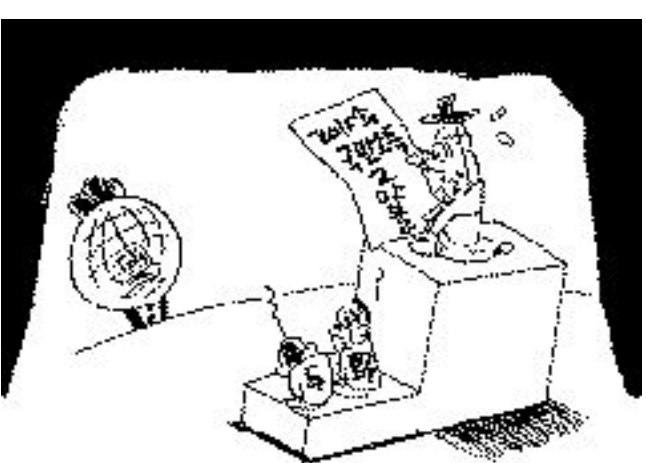
한 전 총리가 체포된 것은 이날 낮 12시 44분경. 수사팀이 마련한 승용차에 올라 탄 한 전 총리는 오후 1시10분경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했다.

김주현 3차장검사는 특수2부장실을 찾아 한 전 총리 및 변호인과 차를 한잔 마시며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설명하고 “법질서에 따라서 진행하되 최대한 예우를 갖추겠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는 “전직 총리로서의 예우를 원하지 않는다. 시민으로서 왔다”고만 간단히 언급했다.

※연합뉴스

## 빛의 만평

- 김종두



政治수준으로 봐선 어림 반쯤어치도...

## “누리꾼들 12월에 가보고 싶은 곳은 해남땅끝”

### 한국관광공사 조사

누리꾼이 12월에 가보고 싶은 곳으로 땅끝 해남을 선정했다. 해남군은 한국관광공사가 12월에 누리꾼이 가보고 싶은 '베스트 그곳'으로 땅끝 해남을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한국관광공사는 매월 누리꾼이 관광지를 선정하고 지역 관광정보를 자발적으로 만들어가도록 하는 온라인 마케팅 사이트 '트래블바이'를 열고 누리꾼의 온라인 투표를 통해 '베스트 그곳'을 선정해 소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선정된 지역을 집중적으로 소개

하고자 여행 스토리 작성, 사진답사 여행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해남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땅끝을 한국관광공사가 시행한 '2006 국민여행실태조사' 결과에서도 가장 가보고 싶은 곳으로 선정된 바 있다.

군 관계자는 “신종플루의 영향에도 다도해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땅끝 전망대와 모노레일카, 황홀한 일출이 연출되는 땀샘 등을 보러 올해도 지난해보다 10% 늘어난 600만 명의 관광객이 다녀갈 정도로 인기가 높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기자 dia@kwangju.co.kr